

일 및 핵 개발이 그 해답이다. 주민을 아사(餓死)에 몰아가는 정권의 존립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에서 살게 되었다. 북한 정권과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 유지와 통일 달성의 유일한 길인 듯 강조돼 온 게 사실이다. 그것까지는 억지로라도 이해하겠는데 북한 주민들의 저 참담한 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 침해가 북한에 많으나 남한에 많으나”는 어느 국회의원의 질문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모양이다. 정확히 모르면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뜻은 알겠는데 거래의 인권 문제에 대해 주무 기관의 장이 이처럼 무심하다는 게 어이없다.

기실은 이게 우리 쪽 국가 기관들의 공통된 분위기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은 인상이었다. 그러면서 ‘통일’에는 왜 것처럼 집착하는지. 통일은 모든 거래가 함께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망되고 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게 오해입니까?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 각 정권의 판단에 유보된 가치인가. 이를 지키는 것은 인류적 사명인가 각 정권의 관용에 맡겨진 선택적 과제인가. 하나인가. 남이라도 나서서 폭군의 손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되찾아 주는 것이 도리인가 이 또한 내정인 만큼 간섭하지 않는게 옳은 태도인가. 진실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 당국의 체제 강화인가 북한 주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인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영삼의 뉴욕 타임스 회견은 사대주의적이고 내정 간섭 유발적인 것으로 지탄받고 제명 당해 마땅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이 복잡해진다. 어쨌든 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내부적 역량으로 유신을 붕괴시키지 않았느냐! 혹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글썄...

[시론] 북한인권 쉬쉬할 때인가

동아일보 2003-04-14 07면 (독자) 40판 칼럼.논단 1935자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유럽연합(EU)은 10일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은 1946년 유엔인권위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번 대북 결의안 상정 배경에는 그간 국제사회가 정치범수용소, 공개 처형, 불법 구금 및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벌 등 북한 인권 실상의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북한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이 공동 작성한 ‘북한의 영양평가보고서 2002’와 ‘2002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서 지적했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김정일 정권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조용한 외교’ 노선 수정돼야 ▼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핵문제 논의에 이어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인권위 상정(16일 통과 예정)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를 똑같이 중요한 비중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 개선(정치 민주화) 없이는 당면한 핵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나치즘과 군국주의를 통해 인류가 깨달은 진리는 ‘국내적 자유’와 ‘국제적 평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었다.

EU와 유엔의 태도는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보편주의적 접근, (국가)주권보다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 인권단체들의 국제적 연대 현상을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로 한 이상 향후 국제사회는 특별보고관 선임, ‘인권사찰’ 실시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대북 인도적 개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다. 4월 1일 국가별 인권상황의제 제9항을 다룬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주제네바 유엔대표부 한국대사가 행한 발언에는 탈북자 등 북한 인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정부는 EU의 북한 인권문제 상정에도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는 ‘조용한 외교’ 노선을 견지했던 것이다.

참여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해설 자료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통일 철학의

빈곤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평화 번영 정책'의 수혜자는 탈북자 등 북한주민을 포함한 전 민족 성원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번영은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퍼주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북 지원과 협력을 제공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대북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한다면 결단코 도덕성과 정당성은 물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서독은 1961년 베를린장벽이 건설된 직후 연방 법무부 산하에 '동독 내 정치적 폭행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 관리의 인권 침해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했고, 이를 통일 후 과거 청산에 활용했다. 동독의 호네커 정권은 양독간 교류 단절을 위협함으로써 대(對)동독 인권정책 변경을 요구했으나 서독은 끝내 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독은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인권 빠진 대북정책 설득력 없어 ▼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5%가 정부의 대북 지원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대북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당당하게 따지고 국제 인권기구의 접근과 참여를 모색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진정한 남북 평화공존, 나아가 민족공동체 형성과 평화적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평화 번영 정책'에서 대북 인권 정책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포럼>'북한 인권' 말할때 됐다

문화일보 2003-01-23 06면 (독자) 03판 칼럼.논단 2157자 제성호 중앙대 교수

중국에 머무르던 80여명의 탈북자가 보트로 탈출해 자유세계로 가려 한 계획이 사전에 발각돼 상당수가 공안(公安)에 체포되고, 또 북한에 강제송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자유와 생존을 위한 필사의 탈출이 유엔 현장에 따라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국제적 보호에 앞장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해 무참히 거부당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외교공관을 통한 기획 망명을 예방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해상을 통한 보트 탈출은 오래 전부터 예견돼 온 일이었다. 여러 민간단체들이 중국 공안의 집요한 추적망을 피해 해상망명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했으나, 첫 시도부터 좌절돼 향후 이들의 지원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탈북자들의 보트 탈출 실패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을 돕던 3명의 한국인이 현재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있는 만큼, 정부가 앞으로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요란하지 않은 대중(對中) 탈북 외교가 탈북자 지위의 이중성, 한·중간의 국력 격차, 탈북자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현실적 제약, 남북관계에 미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데서 나온 교육지책이란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양국간의 조용한 물밑외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운 탈북자 문제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조용한 외교'란 비공식적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적당히 해결하겠다는 것의 외교적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탈북자들이 외교공관 진입을 결행한 후에야 비로소 전면에 나서 뒷수습하는 사후 반응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용한 외교'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조용한 외교'가 잉태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간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 안주해 온 것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무관치 않다. 햇볕정책은 각종 회담과 교류의 성사에 주력한 정책이었다. 반면 북한 주민(탈북자 포함)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 공론화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이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따끔한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대북정책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 대북정책의 주된 목표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7000만 민족 성원이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기에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유보돼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기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진정한 민족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하다. 남북의 주민들이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권 의식을 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는 통일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화해·협력 무드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했던 현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계승하지 말고, 화해·협력과 북한 인권 개선을 병행 또는 연계 추진하는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따질 것은 따지고 짚을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당당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민간단체들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역할을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국군포로, 납북자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사안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셋째, 당면하게는 북한과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탈북자 문제의 역내 다자문제화를 모색하는 한편,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HCHR)의 인도적 개입과 지원을 실현시킴으로써 탈북자 문제의 근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탈북자의 대북 강제 송환 금지와 함께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을 허용해 주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대북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시론] 北의 인권과 하벨의 질문

조선일보 2002-09-27 07면 /홍성필 북한인권시민연합 기획이사·법학박사·전 이화여대 교수

중국 정부와 북한 당국의 강화된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 동포들의 자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외국 대사관에서 한국대사관으로, 외국공관 부설 학교에서 아예 중국 외교부로, 탈출로를 잃은 이들의 질주는 극한을 치닫고 있다.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북한 인권 옹호를 위해 국제 캠페인을 벌여온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체코의 저명한 인권 옹호 및 인도지원 단체인 '피플 인 니드' 재단의 초청으로 체코를 방문해 하벨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을 포함한 의회 및 정부 인사들을 만나 북한 인권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동유럽 인권단체들도 만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벨 대통령은 북한 내 강제수용소와 재중 탈북자들의 실태에 관해 30여분간 진지하게 청취한 뒤 북한 내 민주적 시민들의 결집체가 있는지 먼저 물었다.

의외의 질문에 다소 궁색하게 50년간의 전체주의적 지배 속에서 일반주민들은 결집을 이룰 만한 힘을 갖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 인사들 역시 조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을 내놓았다.

하벨 대통령의 질문은 거꾸로 우리에게 반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다. 돌이켜 보면 인권단체들의 그간의 요구는 무리한 것도, 그렇다고 강력한 것도 아니었다. 중국과 북한당국이 자신들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춰 탈북자들을 대우할 것,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이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 송환해도 수용소에 수감하지 말 것, 수감해도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지 말 것,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내년 3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4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NGO(비정부기구)회의 준비 모임에 참석한 동유럽 인권단체들의 질문도 비슷한 내용들이었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이 왜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가? 북한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단순한 요구나 캠페인 이외에 좀더 효과적인 해결 방안들을 왜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는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왜 공개적으로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인가?

결국 모든 질문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지는 것들이었다.

그간 추진돼온 대북정책들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었는가? 어느 정당의 주장처럼 그렇다면 보다 '실질적인 대북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불시에 통합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북한 주민들의 무작정 남행(南行)을 막고 그들에게 익숙한 배급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통일이 우리 헌법하에서 이뤄지는 것일진대 그들의 기본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일각의 주장처럼 그들을 집단화된 농원 등에 유치하자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들은 바로 집단화체제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을 견딜 수 없어 남행을 결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동경 때문인 것이다.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옹호의 문제는 우리 헌법이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하나의 과제이다.

탈북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애써야 하고, 우선적으로 남쪽으로 온 탈북인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불과 2000명의 사람들이 적응에 실패한다면 2000만명의 통합은 요원한 것이 된다. 유엔 인권담당관이었던 메리 로빈슨은 “오늘의 인권 침해가 바로 내일의 갈등” 이라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하벨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끌어낸 한국의 많은 개인적인 친구들과 우리에게 건투를 빈다고 축원했다. 내년 3월 회의에서는 대통령 관저인 유서깊은 프라하 성에서 북한 인권 필름의 상영을 포함한 성대한 모임이 계획되고 있다. 이제 우리들이 나설 차례다. 북한 인권문제와 통일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을 향해 다가서야 한다.

[시론] ‘北인권’ 과감히 제기할 시점

조선일보 2002-08-27 /박수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전 유엔대사

26일 중국 베이징의 외교부 건물 입구에서 탈북자 7명이 난민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중국 공안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제 탈북자들은 중국의 외국공관이 아닌 중국정부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출구를 찾으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난민의 국제적 보호’ 라는 의제하에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의 인권기구가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결의형식으로 작년에 이어 또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은 실로 그 의의가 크다.

올해 인권위 토의과정에서 중국과 북한대표는 중국에는 ‘탈북자’ 가 없고 오직 ‘경제적 유민(流民)’ 만이 있을 뿐이므로 1951년도 난민협약상의 피난민은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고, 특히 북한대표는 탈북자 문제가 한국 정부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전 인권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인권소위 결의의 특징은 첫째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본국 송환에 반대하는 사람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 둘째 정치적 망명자나 난민의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구금은 불법이라는 점, 셋째 난민접수국은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보호능력과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과 협력하고 또 판무관에게 난민과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난민의 지위결정을 촉진토록 한다는 점 등이다.

결의가 작년과 크게 다른 것은 난민(refugee)의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 ‘모든 사람’ 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국가들이 지켜야 할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 점이다.

인권소위원회가 탈북자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중국에 은거하고 있는 탈북자는 세계 도처에 있는 2000여만명의 난민과는 달리 유엔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집단으로서 본국 또는 거주국으로부터의 체포 구금 강제송환의 악순환 속에서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탈북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할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으나 북한이 사실상 그 책임을 포기한 이상 한국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의 책임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탈북자 문제가 한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고 햇볕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일관된 정책에 입각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양자협약에서 탈북자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하고 그들의 중국 내 존재를 인정받도록 하고 동시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개입이 용인되도록 협상에 나설 때다.

탈북자 문제는 결코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의정서에 의하여 처리될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인권의 문제임을 이번 유엔인권소위 결의가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간 안보와 '개인 주권'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시대이다.

오늘날 국제 인권법이 모든 다른 법에 우선하고 있음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이므로 중국과 북한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과감히 제기할 시점에 도달했다.

[시론] '북한 인권' 침묵이 금?

동아일보 2002-05-14 07면 (독자) 05판 칼럼.논단 2082자 박상섭 서울대 국제정치학

8일 중국 선양의 일본총영사관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던 장길수군 친척 5명에 대한 중국 경찰의 강제연행 사건을 놓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외교마찰이 점차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총영사관 구내에서의 연행이 일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이 논쟁의 진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영사관 진입을 막던 중국 경찰관의 벗겨진 모자를 친절히 주워주는 일본 영사관원의 우호적 태도를 보면서 현재 진행되는 중일간의 논쟁이 국제적 체면 때문에 생긴 갈등일 뿐 어느 쪽도 인권 문제를 별로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씁쓸하다. 비록 다투고는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골치 아픈 일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중국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정부 탈북자 뒷처리 급급▼

한편 미국총영사관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3인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의 현정권은 '악의 축'이지만 그 국민에 대해서는 깊은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사의 진실성 여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 미국 정부도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말 흥미로운 일은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국인 북한에 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탈북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그 유일한 탈출경로를 이루는 중국은 탈북자들의 개인적 범법행위로 취급하고 있고 일본은 단지 자신에게 직접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점에 관해서만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래야만 할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탈북 행렬이 북한 정치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하는 만큼 그렇게 소극적이고 대중적인 정책의 약효가 곧 소진될 것임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뻔하다. 이번 문제가 임시변통적으로 해결된다 해도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또 터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대부분의 사람이 단순히 중일간의 외교마찰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물론 중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안전한 인도를 위해서는 조용한 외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태 전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일은 많아 보이지 않기에 대안 제시도 없이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정부는 전혀 잘못이 없는가.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입국시키기 위해 조용한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일리는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만일 북한이 탈북자의 수용을 문제삼고 나오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현정부는 출범 초부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절망적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해 일체 침묵하는 것은 과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변국에 대해 인권중시의 외교를 요구하는 일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았는지 실로 궁금하다.

지속되는 탈북자의 문제를 보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히 윤리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직결되는 폭발성있는 쟁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 당사국인 북한이 그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북한이 문제를 인정하는 일부부터 필요하다. 이 점을 위해 주변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다.

▼북한정권 비위만 맞춰야하나▼

중일 마찰이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탈북자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를 근치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더 심각한 여론의 환기가 필요할 것이다. 여론의 환기를 위해서는 보다 큰 사건이 다시 터져야 할지도 모른다. 계속 비위만 맞추면서 북한 정권의 태도가 혹시나 바뀌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일처럼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인권도, 평화도, 안정도 모두 신기루 같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 같은 점이 인식되기 위해 더 긴 탈북 행렬이 이어져야만 할지도 모른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포럼> '탈북자' 해법은 있다

문화일보 2002-04-10 06면 (독자) 03판 칼럼.논단 2101자 /글 김정원 세종대 석좌교수·국제정치학

25명의 탈북자 한국 망명 뉴스가 세계 언론을 뒤덮은 데 이어,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북한 인권은 세계 인권의 주요 화두가 됐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내정 간섭' 이라고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의 실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엄연한 사실임을 증명해준다. 1996년 대홍수 이후 탈북자가 급증했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주권 침해' 주장에 의해 국제기구나 한국 정부도 '조용한 외교' 로 문제를 처리해왔다. 그 사이 탈북자 양산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북한은 한국 미국 등의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했으며 탈북자는 수십만명으로 증가했다. 몇몇 탈북자의 망명이 성공하면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탈출경로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북·중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의 문제로 확대됐다. 초기에는 식량난에 탈출 동기가 국한됐지만, 점차 김정일 정권의 독재를 인지하고 정치·종교·교육적 '자유' 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세계대전과 공산혁명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역사를 돌아보면 탈북자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초반 전쟁과 혁명의 여파로 러시아에는 50만명의 전쟁포로와 3000만명의 민간인이 기아에 처했다. 이들이 동유럽으로 탈출을 시도하면서 이 난민문제는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개별국가들이 이들을 방관하는 사이 난민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국제연맹은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을 난민 담당관에 임명, '국제적 차원' 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난센은 난민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소집했다. 1922년 5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난민들의 여행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난민신분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난민회의 자료를 보면 러시아 난민을 '옛 러시아제국 출신으로서, 소련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부터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쟁포로 등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더 많은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이 신분 증명서는 국제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유명한 '난센 여권(Nansen passport)' 으로 명명됐다.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난민이 머무르고 있는 국가는 동일한 양식의 난센 여권을 발급하여 전쟁포로는 고국으로, 공산주의를 피해 도피한 난민들은 제3국으로 정착하게 해주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와 라트비아에 머물렀던 4만여명은 전원 난센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유고슬라비아 등도 난센 여권을 발부했다. 심지어 중국도 1922년 7월 이래로 1927·1931·1938년에 국제연맹 난민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난센 여권의 발급 취지에 동의했다. 이처럼 참혹한 전쟁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난민문제를 국제사회와 국제기구가 나서서 해결한 것은 20세기가 남긴 인류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오늘날 미국에 아무리 많은 멕시코 불법 체류자가 있더라도 멕시코 군경이 미국에 파견되어 그들을 강제 송환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서독 정부가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대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만명의 동독 이탈주민은 동독난민으로 전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탈북자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도피생활을 하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하여 탈북자 구제를 위한 국제인권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그 회의에서 중국에 수용시설을 마련하고 난민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도 중국이 탈북자의 신분 보장을 거부한다면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들이 21세기 난센 여권을 발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한국의 대통령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시하고 있다.

기고/ 탈북자 돕기 '내실있는 접근을'

경향신문 2002-03-25 07면 (독자) 45판 칼럼.논단 1860자

지난 15일 탈북자 25명이 중국에서 추방되어 필리핀을 경유, 18일 한국땅을 밟은 것은 탈북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북한과 중국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국가의 비정부기구와 정부 및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개입된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탈북사건은 작년 11월 영국의 한 인권회의에서 모의과정이 시작되어 미국, 유럽,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적극 개입한 사례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추방되어 필리핀을 경유 서울에 도착하기까지의 비용을 한국 정부와 유엔이 분담한 것도 유엔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탈북사건의 지휘를 맡았던 독일 의사 출신 폴러첸이 앞으로도 유사한 탈출 계획이 있으며 궁극적 목표는 '난민지위'의 인정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의 어려움은 단순히 국제법적인 근거를 둘러싼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의 태도와 정책의 문제이며 난민지위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될 탈북자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벌써 중국 정부는 이번 탈북자 사태를 조용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함으로써 유사한 계획에 췌기를 막는 발언도 하고 있다. 북한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하지만 중국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국제기구.민간단체와 연대

우선 중국과의 협력에서 큰 문제는 탈북자의 존재 인정 여부이다. 민간단체들의 추계로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하는 탈북자의 존재에 대해 그동안 중국의 외교부나 당의 대외연락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옌벤 등 국경지역에서 외국의 비정부기구와 선교 단체들이 벌이는 여러가지 형태의 인도적인 지원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

▲신변안전 보호대책 강구를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생겨나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안보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자가 개인 차원이 아닌 대규모이고 조직적이 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는 외교부만이 아닌 당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관여할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제화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에 대해 외교부를 통한 공식적 채널보다 당.정지도부 및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문제의 성격과 중국 외교정책 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중국 외교부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탈북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거나 협조를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외교적 노력을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지난 2월 도쿄에서 열린 '북한 인권 및 탈북자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민간기구들의 활동이 확인된 바 있다. 유럽, 캐나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와 선교단체들은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도록 미 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언론 홍보는 오히려 중국 정부의 반발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들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탈북자들의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탈북자 개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시론] 탈북문제 해결책은

한국일보 2002-03-20 06면 (독자) 30판 칼럼.논단 1809자 서동만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중국이 25명 탈북자의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자칫하면 사건의 파장이 걸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장길수군 사건에 이어 제3국행 방식이 관행으로 정착되는 듯한 느낌이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 한중, 북중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의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다시 한국 정부가 난민자격 확보 등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탈북자 문제는 이들에게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인권 차원의 사안이다.

이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법적 난민자격 인정은 당연한 요구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 매우 복합적 차원의 해결이 요청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처리는 중국 정부의 권한이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 등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 탈북자에게 국제적 난민자격을 인정하면 똑같이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내정 개입을 허용하게 되며 가뜩이나 꼬여 있는 미중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이다. 현재로서는 제3국행 방식이 중국의 한계 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와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부딪치게 되는 물음은 탈북자가 줄어들기를 원하는가 늘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늘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논리의 최종 도달점은 북한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남북 화해협력의 방향에서 본다면 당연히 줄어야 한다.

오히려 향후 이러한 탈북자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경제제건까지 시야에 넣은 남북 화해협력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 내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체제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나 중국에 대하여 탈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려면 남한 정부나 단체들이 이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당연히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대북 경제지원을 해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남한이 대북 경제지원을 국제적으로 떳떳이 내세울 만큼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증가한다면 그 때에는 당당하게 북한에게 이 문제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족적 견지에서 중국 이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나아가 남북간 화해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대미, 대일관계에 대한 입장도 열쇠가 된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탈북자 인권단체가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단체를 포함하여 지난번 장길수군 사건 배후에 있던 일본의 단체들이 북일 수교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세력이다.

북미, 북일의 미수교 상태는 사실상 적대관계와 다름이 없다. 문제는 이 적대관계 해소를 가로막는 구실로 인권문제가 거론된다는 데 있다.

바로 스페인이 의장국인 EU국가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설득력을 갖는 것은 미, 일과는 달리 북한과 수교를 맺고 경제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도 EU와는 인권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국내의 탈북자 단체들에게도 남북 화해협력의 흐름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문제해결을 피하는 균형 잡힌 시각과 지혜가 요청된다.

이는 탈북자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책은 다름아닌 남북 화해협력,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란 자각을 뜻한다.

[시론]탈북문제, 본질을 직시하라

세계일보 2002-03-19 06면 (독자) 40판 칼럼.논단 1714자 /이원웅 관동대학교수.북한학

수많은 영화가 그려내듯이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은 극적이다. 바로 수일전 빨간 운동모자를 쓴 25명의 탈북자 집단이 녹색제복을 입은 중국공안의 제지를 뿌리치고 북경주재 스페인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드는 천연색 사진은 뼈빠운 영화만큼 극적이었다. 이 사건은 재중 탈북자문제를 국내외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며 그 동안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던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들이 어제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 고아소녀 들을 포함한 25명의 귀중한 생명들이 자유로운 인간개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그 어떠한 사회적 보호조차 박탈당하는 말 그대로 생지옥과 같은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은 이제부터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변방의 한 족 홀아비에게 소나 말 정도의 가격으로 팔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들 스스로 모든 인연을 박차고 떠난 고향땅에 강제송환되어 '조국배신자'라는 낙인을 안고 구타와 옥설, 차별과 감시 속에서 일생을 보내야 할 위험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탈북자들은 평생 동안 나올 수 없는 집단수용소에 보내질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들의 극적인 탈출기의 흥분 속에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고 넘어갈 수 없다. 이번 사건은 99년 탈북7인 북한강제송환사건, 작년 6월 장길수군 가족 망명사건에 뒤이은 재중 탈북자들이 감행한 탈출기의 '스페인대사관 판'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도 "××대사관 판" 버전들이 계속 출시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재중 탈북자문제의 핵심적인 본질을 아무 것도 바꾸어 놓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민족 근대역사상 최대의 비극, 최대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재중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조치도 얻어내지 못했다. 지난 버전의 탈출기와 마찬가지로 난민지위 인정을 성취하지 못하고 중국 당국의 "인도적 추방조치"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버린 점에서 그러하다. 탈북자문제의 본질은 이들의 '탈출'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탈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당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무차별 강제 송환시키고 있으며 더욱 가혹한 억압과 폭력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다.

탈북자문제의 본질은 북한 인권문제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현 정부가 온힘을 쏟아부어 매달려온 '햇볕정책'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수많은 햇볕의 제안 속에 과연 인간 이하의 조건속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재중 탈북자문제에 대한 빛줄기는 왜 없었는지 궁금하다.

재중탈북자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중국정부와 북한의 탈북자정책은 이번 사건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난 장길수군 사건때 이후와 마찬가지로 동북3성의 탈북자에 대한 중국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한의 국경통제와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은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이들의 인권유린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입증된 것처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자발적으로 탈북자문제 해결에 매진해온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포럼>'탈북자' 국제공론화 하자

문화일보 2002-03-18 06면 (독자) 03판 칼럼.논단 2059자 /글 김찬규 경희대명예교수·국제법

지난 14일 탈북자 25명이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여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과 국제관례, 중국법 및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명의 탈북자는 15일 필리핀으로 강제추방되어 18일 서울로 오

는데 이것이 과연 국제법과 국제관례, 중국법 및 인도주의에 따른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난민의 처리에 관한 국제조약으로는 1951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스페인은 1978년 8월 14일 이 조약에 가입했는데 중국이 공산국가로서는 제일 먼저 이 조약에 가입한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베트남의 적화통일후 새로 들어선 공산정권이 부유층에 속했던 중국계 자국민을 탄압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중국계가 중국으로 탈출하고 중국이 이들을 강제송환하라는 베트남측 요구에 맞서기 위해 법적 방패가 필요했다는 사정이 그것이다.

이 협약에는 난민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서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확고한 공포로 해서 자기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와 같은 공포로 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치 않은 이" 로 되어 있다(제1조A <2>).

그런데 북한 탈출자들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서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확고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출한 이들이기에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그들의 입국은 불법이기에 그들을 출발지국이고 국적국인 북한으로 강제송환함이 마땅하다는 게 중국의 시각이다.

난민협약에는 또한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서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해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에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제33조 1).

이에 대해 중국은 그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북한법상 중벌을 받게 될 것임은 명백하지만 그들은 협약상의 난민도 아니고 중벌이 상기한 4가지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중국이 25명의 탈북자를 북한이 아닌 필리핀으로 강제 추방한데는 인도주의적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인도주의적 배려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중국 내 수많은 탈북자를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1999년 11월 북한을 탈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던 탈북자 7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잡혔다. 이들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사무소가 난민 인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 외교부가 또한 한국행 비자까지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했다.

이들을 인수한 중국은 한국 정부의 설득 및 UNHCR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0년 1월 12일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이 일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고, UNHCR는 난민협약 및 인도의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번 사건이 신속히 종결된 데는 관계국 및 관계기관의 능률적 대처외에 다국적 인권단체들의 헌신적 도움과 북한의 사정이 중요한 몫을 했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북한이 비교적 조용했던 것은 지금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양축전을 앞두고 있어 국제적 물의를 증폭시키지 않으려는 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탈북자 보호의 요체는 탈북자 문제를 국제공론화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들의 참상, 특히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조용한 접근을 내세워 왔는데 이것은 그들을 망각의 늪으로 빠뜨릴 뿐 그들을 도우는 데 도움이 안될 것이다.

<포럼>탈북자문제 보편적 접근을

문화일보 2003-10-08 06면 (독자) 03판 칼럼.논단 2152자 / 제성호 중앙대 국제법 교수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의 민족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다. 조선로동당에 입당, 친북 활동을 해온 송두울씨의 사법 처리 여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 근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그러한 예들이다. 앞의 두 사안에 비해 탈북자 문제는 별로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이슈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둔감해진 까닭이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120여명의 탈북

자 유입으로 수용소화되었고, 이 때문에 비자 발급 및 영사 보호 등 본연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는 중국 정부가 우리 영사부 주변에 설치한 철조망으로 인해 가짜 중국 공민증을 소지한 탈북자의 진입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 조사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 기인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탈북자 문제를 현지화하지 못하여, 우리 공관이 탈북자 유입을 유인하는 장소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결, 즉 중국의 선처를 바라는 자세도 한 몫 했다. 말하자면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상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했었는데, 우회적인 접근과 미봉책에 의지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하겠다.

작년 이후 탈북자 문제는 이른바 '기획망명'과 중국의 추방권 행사로 한국행이 성사됨에 따라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의 제3국 추방을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른 인도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내심 '아량을 베푸는 시혜적 조치'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인권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탈북자 처리는 실종되고 있고, 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불법 체류자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탈북자들의 문제 상황은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근과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이 조·중간의 전통적인 맹방 관계를 고려해 적극 나서기 어렵다면, 중립적인 인도적 구호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문제를 기본적 인권 문제, 즉 자유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 줄 것과 UNHCR 등 국제기관의 개입과 보호를 허용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 규범에 입각한 해결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즉,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근거해 다자주의적 해결(조·중 및 한·중간 양자 외교 중심에서 탈피) 및 국제적 고통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UNHCR를 주선자로 내세워 한·미·중·일·러·UNHCR간의 6자협의체를 이른 시일 안에 결성토록 하고, 여기서 탈북 난민촌 설치, 일시 피난민 지위 부여 및 잠정적 보호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베트남·코소보 난민문제 해결에서의 UNHCR의 역할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측 입장 변화 유도를 위해 비공식적인 대북 '인권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 상·하원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 증진, 탈북자의 지원 등을 위해 2006년까지 총 2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탈북자의 자국내 수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을 다음 달 초에 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탈북자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존의 해결 방도에 안주하는 감이 있다.

현재 1명의 탈북자 국내정착 지원금(정착금 및 주거 지원비)은 3700만원 정도이다. 이 돈으로는 중국내 탈북자 5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자적 해결이 가능해질 경우 가급적 탈북자들의 중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러·몽골 등 주변 국가들이 탈북자들의 수용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중국의 탈북자 조사 지체로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의 정상적인 업무가 중단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탈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중국 정부와 진지한 협상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아침을 열며] 불태운 성조기와 인공기

한국일보 2003-09-10 19면 (독자) 41판 칼럼.논단 1882자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근래 반전반미 집회에서 성조기나 부시 대통령의 인형이 불타고 있고, 반북반핵 집회에서는 인공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찢겨지고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부시 대통령이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며, 성조기이건 인공기이건 국기를 불태우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행위로 보호되어야 한다.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정책에 항의하며 성조기를 불태운 시민이 주(州)법으로 처벌된 사건에 대하여, 국기소각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고 판시(判示)한 바 있다. 이것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총련의 성조기 소각 그 자체는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 이유이다. 우리 형법도 외국의 국기 중 '공용'(公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불태우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외국 국기 소각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기소각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해석의 차원을 넘는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불타는 성조기는 시민의 정치의식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 대미종속을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적 숭미(崇美)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미'가 바로 '친북'이 되고 '이적'(利敵)이 되는 시대는 종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학생운동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은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총련의 노선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 진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총련 내부의 다양한 노선과 경향을 무시하고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금압하는 공안당국과 대법원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한총련의 남북한 정부에 대한 평가, 정세인식 그리고 투쟁방식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온정주의'적 평가와 남한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과소평가, '선도투'(先導鬪)에 대한 집착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운동이 사회진보의 견인차를 자부하려면 내부에 존재하는 교조주의적 편향과 지금 당장 결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공기를 불태우며 "타도 북한", "타도 친북정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진정 '보수'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 북한 인권의 현실이 심각하며,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열망하는 대구 시민들의 염원도 무시하고 판을 깨는 듯한 이벤트를 가졌어야 했을까?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는 어떠한 정부비판도 하지 않다가,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정부에 대하여 "반역독재정권"이라고 부르며 타도를 외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일까? 또한 안보를 위해 미국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여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기념 집회에 성조기를 휘둘러야 했을까?

한반도의 전쟁위기 속에서 미국 강경파의 편에 서서 "전쟁불사"를 외치고, 북한과의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을 찾을 수는 없다. 피 땀을 흘리는 증오와 파괴의 선동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불타는 성조기와 인공기는 '한미갈등', '남북갈등'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이다. 이러한 모순은 화해의 주문을 외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각 모순들은 일정 수준에서 제도적 틀 안에 수렴되어 해소되어야 한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 핵위기의 해소와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 등이 그 요체이다. 성조기나 인공기의 소각은 정치적 기본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일회성 분노의 표출이거나 상징적 저항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제 한미간, 남북간을 각각 새로이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일에 고민을 집중할 때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만들어질 때 더 이상 성조기나 인공기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인권 논의의 함정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적잖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분단상황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첫째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혹여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대북대결주의적 의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북한의 인권을 빌미로 하여 우리 사회에 냉전적 대결의식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 상황을 조장하거나 진행중인 대화결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마땅하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을 내걸면서 속으로는 민족과파괴적인 남북대결을 유지하려는 일부의 의도는 분명 인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묵놓아 외치면서 정작 식량난에 빠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는 모순적 처사는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군사독재 시절 폭압적인 인권탄압 상황하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제기조차 하지 않았던 언론과 단체가 최근에 북한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 역시 그들의 본심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경우 인권은 그야말로 명분일 뿐 사실은 남북대결을 고조시키려는 냉전논리의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셋째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저히 객관적인 신빙성에 근거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그리고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같은 신빙성의 논란은 결국 열의 아홉이 북한인권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열의 하나가 사실이 아닐 경우 나머지 아홉의 진실마저 의심받게 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반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잖은 부분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은 탈북자 증언에서 비롯된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 북한과 첨예한 체제대결을 벌이고 있는 남쪽으로 귀순했을 경우 그들 대부분은 북한체제에 대해 사실 이상의 부정적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판명난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사실왜곡의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술하면서 서구에 대한 기준과 북한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잣대'의 경우이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서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으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공개처형의 경우 중국의 공개처형, 싱가포르의 대형, 미국의 전기의자 공개사형 등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예방범죄 차원의 고유한 행형절차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공정한 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민재판식 私刑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평가라 할 수 있다. 서방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맹공격하던 한 신문이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실과 조건을

무시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객관적 균형성마저 상실한 이중잣대의 전형적 사례에 불과하다.

셋째 인권개선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보다는 북한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보장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실현될 수도 없다. 서구의 경우에도 그랬고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대북 비난과 냉전적 남북대결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체제가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북한체제의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증대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기 북한인권 개선의 차원에서도 남북화해의 진작과 상호신뢰의 회복이 과거 냉전적 대결과 상호불신보다 정당한 방향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 시기 우리의 북한인권 논의는 정치적 의도성 배제, 객관적인 신빙성 유지, 인권개선의 효율성을 충분히 감안한 연후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인권개선 요구는 정작 남북대결 고취, 왜곡과 과장 만연, 인권개선 후퇴 등 스스로 원하지 않는 가장 반인권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는 그것을 내심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¹⁾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

한때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남북의 적대상황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고 이를 정적탄압에 활용했던 군사독재하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북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상황적 조건 때문이었다. 한동안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것이 관변이나 어용단체 혹은 수구언론의 전유물이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가 실제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자칫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역시 시민단체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선블리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예전처럼 냉전논리로 해석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국제적 차원의 인권문제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 악화로 북한주민의 전체 생명권이 우려되고 탈북자들에 의해 북한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 인민을 동포애적 관점에서든 우려는 운동에서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하는 고강도의 대응까지 이제 시민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새롭게 헤쳐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거 북한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가졌던 인사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되었다면서 북한체제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는 격세지감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가 시민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금에도 여전히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토록 요구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체제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는가 하면²⁾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아직 불충분한 남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입장도³⁾ 존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북측을 자극하지 말고 북한체제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돕기와 남북화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는가 하면⁴⁾ 지금 제기되는 북한인권의 실태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부정확한 파악이며 따라서 이는 냉전적 대결에 기여하는 반복모략일 뿐이라는 전통적 의견⁵⁾ 또한 존재한다.

1) 이 글은 줄고,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국인권재단 편, 『한반도 평화와 인권 2』, 사람생각, 2002에서 일부를 발췌보완한 것임. 아울러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워크샵의 생산적 토론을 위해 선명한 문제제기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적으로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와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북한인권시민연합)의 입장을 들 수 있다.

3) 서준식씨가 이끄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에 가깝다.

4) 북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모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사)좋은벗들이 대표적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지금에도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이 문제가 자칫 남북화해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냉전적 대결의 심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2.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법: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

북한인권 논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는 이른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이다. 지금껏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서구의 시각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성립된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체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서구에서도 현대 인권의 개념을 논의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입장과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이 크게 대별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서구적 관점의 인권개념이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각국이 처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의 측면에서 인권의 상대주의를 주장하기도 한다. 서구 인권의 발전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이른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 외에도 최근에 서구중심의 인권개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3세계 개도국의 '발전권' 문제와 비서방국가의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 간주되는 인권개념이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인주의의 토양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당연히 상이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비서방국가에서 인권의 개념은 서구의 그것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⁶⁾ 이른바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인권의 특수성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⁷⁾ 예컨대 죄를 범한 미국인에게 싱가포르의 법에 따라 태형이 가해진 것을 두고 미국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과 리관유 수상이 서구 전통에서 유래한 인권개념으로 아시아를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반발한 것은 서구중심주의의 인권에 대한 대표적 논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인권개념의 핵심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성립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른바 기본권으로 표현되는 이 권리들은 지금 시기 동서양을 넘어 대개의 경우 동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천부인권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획득해야 할 권리로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서구적 관점의 문제제기 역시 주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같은 서구의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치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주장

5). 전국연합과 한총련 및 한호석 소장이 이끄는 미국의 통일학연구소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인권재단 편, 『21세기의 인권 1』, 한길사, 2000, 93-116쪽 참조.

7).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의 상대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계간 사상, 1996년 겨울호 특집으로 실린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이라는 주제의 다수의 논문들을 참조. 그리고 이들 논문 일부는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1998)에 발췌요약되어 있다.

과 인권의 상대주의에 입각한 서구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함께 상대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에서 사회주의적 정치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자신의 잣대와 함께 상대방이 설명하고 있는 잣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3. 북한인권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적잖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분단상황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1) 정치적 의도성: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첫째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혹여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대북대결주의적 의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 역시 소중한 것이기에 그들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본래의 목적인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냉전적 대결관점을 고양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휘방놓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북한의 인권을 빌미로 하여 우리 사회에 냉전적 대결의식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 상황을 조장하거나 진행중인 대화결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마땅하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을 내걸면서 속으로는 민족파괴적인 남북대결을 유지하려는 일부의 의도는 분명 인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목놓아 외치면서 정작 식량난에 빠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는 모순적 처사는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소말리아 사태와 고베 지진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찬성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만은 한사코 말리는 일부 언론과 냉전세력의 소동을 보면 그들이 제기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냉전주의적 대결논리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소중하다면서 정작 기본적 생존권의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어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권은 명분일 뿐 사실은 남북대결을 고조시키려는 냉전논리의 정치적 술수에 다름아닌 것이다.

해마다 개최되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가 국내 우수 언론에 의해 집중후원되고 대서특필되고 있다.⁸⁾

8). 1999년부터 개최되었던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조선일보에 의해 후원되고

평소 대북 식량지원을 앞장서서 반대하던 신문이 유독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열과 성을 다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북한인권이라는 이슈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의미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대북 대결주의의 고양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그리고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같은 신빙성의 논란은 결국 열의 아홉이 북한인권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열의 하나가 사실이 아닐 경우 나머지 아홉의 진실마저 의심받게 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반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잖은 부분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은 탈북자 증언에서 비롯된다. 국내외의 각종 북한인권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입증근거로 삼고 있지만 현지에서의 객관적인 현장 조사와 실태파악이 수반되지 않는 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 북한과 첨예한 체제대결을 벌이고 있는 남쪽으로 귀순했을 경우 그들 대부분은 북한체제에 대해 사실 이상의 부정적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판명난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사실왜곡의 두 번째 가능성은 자신의 선입관에 의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정확치 않은 설명을 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설명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왜곡의 세 번째 가능성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술하면서 서구에 대한 기준과 북한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잣대'의 경우이다. 이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서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으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갖는 문제점은 서구 인권개념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비서방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조건을 외면한 채 균형적 관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의 주요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유교적 전통과 아시아적 문화에 입각한 북한의 독자적인 특성을 서구적 기준으로 비난하는 것 등은 그 대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공개처형의 경우 중국의 공개처형, 싱가포르의 대형, 미국의 전기의자 사형 등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예방범죄 차원의 고유한 행형질차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공정한 법질차도 거치지 않은 인민재판식 私刑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평가라 할 수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예단을 가진 채로 오로지 서구의 인권관점에서만 북한을 재단하는 것은 자칫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해 필요이상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만든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밖의' 관점과 함께 그들 자신이 설명하고 주장하는 바의 '안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방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맹공격하던 한 신문이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실과 조건을 무시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은⁹⁾ 객관적 균형성마저 상실한 이중잣대의 전형적 사례에 불과하다. 입북자의 북한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고 쉽게 치부하면서 탈북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 이중잣대이고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인권현실을 공식발표하는 것에는 수긍하면서도 북한 정부가 외국의 인권탄압 우려에 대해 해명과 부인을 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이중잣대임에 틀림없다. 물론 우리와 다른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성을 상실한 채 이중잣대에만 익숙한 북한인권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장의 신빙성과 설득력마저 의심받게 한다는 사실이다.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셋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보장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실현될 수도 없다. 서구의 경우에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고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대북 비난과 냉전적 남북대결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¹⁰⁾ 북한체제의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¹¹⁾

9). '미국과 국가보안법', 조선일보, 1994년 2월 26일자 사설. 여기에서 조선일보는 '고전적 의미의 내정간섭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 나라의 관리가 다른 나라의 국내법에 관해 공개적으로 그 폐지를 운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이 한국인권의 결정적인 커다란 장애요소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10). Denny Roy, 'The Security-Human Rights Nexus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XI, No. 1 (Winter/Spring, 1997), pp. 1-19.

11). 동서 대결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인권향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알려진 1975년의 헬싱키 협정의 경우 도 인권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정과 안보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

이는 결국 북한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증대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기 남북화해의 진작과 상호신뢰의 회복이 과거 냉전적 대결과 상호불신보다 정당한 방향임은 바로 북한인권 개선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토론 # 최근 탈북자 입국문제와 관련하여

(1) 북한이탈주민의 성격문제: 정치적 망명인가? 비법 월경자인가?

○ 중국 등에 산재되어 있는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모두 다 북한체제를 정치적으로 포기하고 등진 망명자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을 떠도는 '경제적 이유의 월경자'인가?

- 1950-60년대 남측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체류했던 한국사람들의 경우?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 문제: 인권을 앞세운 명분인가? 북한붕괴를 노린 정치적 행위인가?

○ 식량을 얻으려 월경한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체제 붕괴를 위해 민간단체들이 기획명명을 실행하는 것의 정당성?

- 예컨대 1960년대 일본이나 미국으로 건너간 남측주민들을 상대로 현지 친북인사들이나 북한사람들이 경제적 시혜를 조건으로(지금 중국내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후 받게 되어 있는 정착지원금은 그들에게 일확천금과도 같은 엄청난 액수의 돈임) 북으로의 망명을 종용했을 경우?

(3)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입장?

○ 공관을 통한 정치적 망명 희망자에 대해 아무리 그 숫자가 많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의 명분과 실리?

- 수가 급증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

-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영향?

경계인 송두율 교수를 위하여 -연합뉴스 강진욱기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여론재판이 한창이다. 그가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가 아니라 강사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에서부터 북한의 거물급 간첩이라는 구태의연한 주장에 이르기까지 점입가경이다.

한 인간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정치적 생명을 말살하려는 냉전시대의 퇴폐적 행태가 개탄스럽고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남북한 화해와 통일의 대하에 오물을 튀기려는 작태가 격정스럽다.

송 교수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주석 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함으로써 이런 여론몰이를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그가 시인한 김철수 가명 사용은 그의 의식 또는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설사 그가 북측으로부터 "후보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한들 그 자신이 후보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예우는 북측의 선의였을 뿐이다.

김일성 주석이 살아생전 재독 음악가 윤이상 선생을 "조선의 재간꾼"이라고 극진히 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측이 해외 동포 학자로서 명성을 쌓고 민주화에 헌신하는 송 교수를 높이 샀다면 그것은 환영해 마지 않을 일이다.

그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그의 '북 편향'은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폭압과 재외국민 배척 등에 비취볼 때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경계인이라고 하지만 남쪽에 올 수 없으나 북쪽에 기울 수밖에 없었다"는 송 교수 식구들의 항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지금 그는 이곳 남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논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 스스로 어느 한 쪽을 택하기를 거부한다지만 그는 분명 남한을 택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런 그를 이곳 남쪽은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여론의 재판대에 세우려 한다.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고 욕박지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엇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다.

"너무 한 쪽에 발을 깊숙이 담근 것 같다"(유인태 정무수석)거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것 같다"(문화상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발언은 다분히 현재의 잣대로 과거 송 교수의 행적을 시비하는 것이 아닐까?

73년 입북 때 통과의례일 뿐 아무런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직접 해명했던 소위 '입당원서' 문제나 94년 김 주석 장례식때 정치국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은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그의 처지가 매우 안쓰럽다.

송 교수에 대한 여론몰이는 한 마디로 확인되지 않은 '설'을 사실인양 각색한 뒤 이 각본을 뿌리삼아 줄기를 세우고 가지를 붙이고 또 이 가지에서 결가지를 붙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송 교수 자신은 엄연히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밝혔고 변호인측도 국정원 보고자료와 그의 실제 진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의 입을 통해 발설되고 당국자 또는 관계자들의 '소극적 시인' 또는 '묵시적 동의'로 형상화되는 그의 '진술자료'와 그의 주장간의 차이는 '그가 국정원 조사에서 어떻게 했다더라'는 식의

또다른 설(說)과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물들의 증언으로 배워진다.

5일 언론에 유포된 한 정치권 인사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송 교수가 당초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다 국정원이 CIA 자료를 들이대자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식이다. 책임 있는 조사 당국이 자료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말로 전해들었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퍼뜨리며 "송두울=김철수=거물 간첩"이라는 여론을 부풀리는 것이다.

송 교수의 권유로 입북했다는 오모씨나 송 교수의 정체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언은 모두 북측을 이탈한 뒤 '적성국'인 남한 또는 미국으로 망명한 이들의 주장이거나 이들이 조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뿐이다. 모두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설'의 뿌리는 1982년 남한에 들어왔다 15년 만인 1997년 의문의 죽임을 당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사망 당시 37세)씨의 발언이다. 한 언론사는 5일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한 정보위원'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은 지난 82년 귀순했다가 97년 피살된 이한영씨의 제보로 송 교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98년 귀순한 황장엽씨의 진술로 송 교수의 혐의를 확신했으며 CIA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송 교수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이한영씨는 귀순한 것이 아니라 납치돼 남한 당국으로 끌려왔고 이 사실을 남한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는 지적도 있으며(황석영씨 증언, 오마이뉴스 2002.2.14) 그의 죽음(1997.2.15)은 "황장엽 망명에 대한 북한의 보복"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 축하 선물"로 묘사되기도 했지만 그 배후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운명을 살다 간 이씨가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암약 중인 독일 동포가 있다"고 제보(?)하면서 '김철수'가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씨가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며칠 뒤 서울에 온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가 98년 7월 책을 내면서 "송두울 교수 =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 설을 다시 한 번 재탕해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한영씨의 진술이 확보된 뒤 우리 수사당국은 유럽 첩보망을 총동원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로부터 7년여 만인 1989년 이씨가 말한 '김철수'는 송두울 교수가 아닌 제3의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황장엽씨가 <북한의 진실과 허위>를 통해 '송두울=김철수' 설을 퍼뜨린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998년 8월20일 한 신문은 독일 본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작성한 '영사증명서'(문서번호 Certi-1201)를 단독 입수해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한 바 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독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측은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과 관련해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민협)를 내사한 결과 그해 9월1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서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 공작원은 조선노동당 구라파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수(당시 62)라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82.7(82년7월) 김정일은 측근 인물에게 '서독에는 조선노동당 구라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김철수다'라고 언동한 사실이 있어 김철수의 신원을 추적 확인한 결과 김철수는 김성수의 가명으로 밝혀졌다"며 "김성수는 북한의 직접 지령에 따라 서독을 거점으로 암약하고 있는 재독 북한 공작원임"이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에 나오는 '김정일 측근 인물'은 바로 최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이한영을 가리킨다.

1989년 정보당국이 서독 대사관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이나 최근 송두울 교수를 옥죄는 엄청난 분량의 조사자료는 모두 이한영의 진술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이미 1989년 9월1일 외교부 보고 문건을 통해 송두울은 김철수가 아님이 확인됐음에도 어떤 경위에서 또다시 '송두울=김

철수'라는 공식이 유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한영씨의 제보로 송 교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98년 귀순한 황장엽씨의 진술로 송 교수의 혐의를 확신했다"는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의 주장이 의심스러운 이유이다.'

"송두울=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각본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14년 전 독일 총영사관 부영사이자 3등서기관인 신용기씨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고 'Certi-1201'라는 일련번호가 찍힌 A4 용지 108장 분량의 외교부 문서의 존재가 먼저 규명됐어야 마땅하다. 이 상당량의 자료와 이를 위한 7년간의 어마어마한 조사는 어디 가고 10년 만에 나온 황씨 주장에서 또 '확신'을 할 수 있을까?

19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때 북측이 장의위원 명단에 '김철수'라는 이름을 넣고 송두울 교수를 초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재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4년 뒤 황장엽씨의 주장 이후 송 교수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으로 이 사실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가?

송 교수는 입국 직전 이 문제와 관련해 30여 차례 공판을 통해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의 변호인은 6일 당시 재판에서 국정원 등이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황씨 주장이 나온 지 1년 뒤인 1999년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던 김정필 서기관이 미국으로 망명한 뒤 황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으며 국정원은 송 교수에 대한 이번 조사 때 이 CIA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다른 이들의 증언도 있다지만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다.

스스로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극구 부인하는 당사자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고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북한 이탈주민 증언 자료를 들먹이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그의 정치국 후보위원의 진위 확인이 어려운 탓인지 그의 행적을 문제삼기도 한다. 한 의원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96년 송씨 부친 사망시 김정일 위원장이 친필로 조의를 표하고 1천500마르크(미화 1천달러 상당)의 조의금을 보내기도 했다"며 그의 친북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시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부친의 장례식에조차 갈 수 없는 그의 처지를 북측이 어루만져 줬다면 이 또한 북측의 호의일 뿐이다. 1996년은 여전히 정상회담의 상대를 '전쟁 수괴'로 규정하는 소위 '문민정부'의 서술이 퍼졌을 때이고 송 교수는 당시까지도 '버린 자식'이었다. 당시 문민정부는 그의 입국을 불허했지만 그는 남북학술회의를 성사시키느라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하던 때였다. 버린 자식 돌봐줬다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일 아닐까?

그는 모름지기 억지로라도 반성문을 써야 할 판이다.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더 이상 군사독재에 맞서는 투사로서가 아니라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신 또한 머물 곳을 찾는 한 소시민일 뿐이다. 이 땅에 사는 이 대개가 그렇듯이. 그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은 6일 CBS 회견에서 "송 교수의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이곳 사람들은 조국이 북부와 남부로 갈라져 있으며 반드시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낯설다. 여기만 '나라'이라고 '조국'이며 북녘은 '남의 땅'이요 북녘 형제들은 적성국 주민일 뿐이다. '나 아니면 적'의 관계를 엄격히 제도화한 이 분단된 조국 남녘은 북을 '내 안의 타자'로 봐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분단의 기제가 작동하는 배타적 서클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더 이상 경계인이 아닌 것이다. 그가 빨리 이곳에 정착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강진욱 기자는 <연합뉴스> 북한부 차장입니다

=====

송두울 사건의 진상과 본질을 밝힌다 (민족통신 게시판에서 퍼옴)

강선기

(1) 송두울 사건으로 사회 전체가 온통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해외교포 친북학자를 하루아침에 '건국 이래 최고의 거물간첩'으로 둔갑시킨 송두울 사건은 국정원의 정보조작,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극우언론의 여론조작 등이 뒤엉키면서 도대체 그 사건의 진상과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헛갈리게 되었다.

국정원, 한나라당, 극우언론은 항상 그러하듯, 사건의 진상과 본질을 은폐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떠들어대곤 한다. 그런 악질적인 습관은 제 버릇 개에게 주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여전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입증되었다.

송두울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국정원의 정보조작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사건진상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에 흘러나온 조각난 정보를 주워 맞추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려낼 수 있다.

(2) 국정원이 송두울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조사기록은 무려 1,5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송두울 교수가 1970년대 초부터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독일에서 전개하였으므로 방대한 분량이 되었을 것이다. 검찰 공안부는 국정원의 하수인이므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수사력이 없는 데도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넘겨준 1,500 페이지의 조사기록을 제대로 읽어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의 발표를 자세히 보면, 송 교수가 노동당에 입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송 교수가 작성하여 평양에 보냈던 자필문건, 평양당국으로부터 활동자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평양당국이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송 교수에게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등이 주목된다. 이 증거들은 국정원이 아마도 그러했을 거라고 상상한 정황증거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에서 물증적으로 확인된 물적 증거들이다.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국정원은 송 교수가 입국하면 체포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댔고 실제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위에 열거한 증거들, 다시 말해서 국정원이 조사과정에서 송 교수에게 제시하여 송 교수가 '어떻게 이런 증거까지 입수하였는가' 하고 깜짝 놀라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을 국정원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을까? 위에 열거한 증거들은 송 교수와 평양당국자 둘만 알고 있는 극비사항들인데, 그런 극비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국정원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3) 오래 전부터 송 교수와 접촉하고 연락하였던 평양당국자가 당연히 의혹을 받게 된다. 송 교수와 접촉하고 연락하였던 평양당국자는 누굴까? 송 교수가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으므로 그와 접촉하고 연락하였던 평양당국자는 당연히 베를린에서 활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1999년 1월 13일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베를린 주재 이익대표부 서기관 김경필이다. 그는 당시 처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김경필 부부가 한형수를 비롯한 2-3명의 안기부(당시 명칭) 비밀요원들에게 납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김경필 부부가 자진해서 망명을 한 거냐, 강제로 납치된 거냐 하는 문제는 송두울 사건을 해명하는 데

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망명과 납치의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는 선에서 그 사건에 관한 언급을 마감한다.

당시의 언론보도를 분석해보면, 김경필은 서기관이라는 직급이 낮은 외교관이었으나 자유롭게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닐 정도로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김경필은 직급이 낮은 외교관이 아니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해외에 파견한 연락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가 실종되자 조평통이 나서서 사건진상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송 교수가 재독통일인사라는 점과 통일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인 조평통 사이에서는 연관성이 드러나 보인다. 황장엽은 그가 평양에서 살고 있을 때, 조평통의 지도급 인사인 김용순이 자기에게 송 교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송 교수는 조평통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송 교수와 조평통 사이에서 연락을 맡았던 인물이 김경필이었다. 그러므로 송 교수와 조평통이 알고 있었던 비밀사항은 망명한(또는 납치된) 김경필을 통해서 국정원에 흘러 들어갔다. 망명한(또는 납치된) 김경필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은 이미 오래 전에 송두울 사건에 관한 장문의 씨나리오를 작성해두고 있었다. 1,500 페이지에 달하는 씨나리오는 송두울을 '거물간첩'으로 조작한 악마의 칼이었다. 송두울은 지금 그 악마의 칼날을 피하면서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4)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남사업기관이지만 간첩을 양성하고 침투시키는 기관은 아니다. 대남사업기관이라고 해서 모조리 대남공작, 첩보를 담당하는 간첩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독한 간첩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정신질환 중증환자들에게는 조평통이건 뭐건 평양에 있는 대남사업기관들은 모조리 대남간첩소굴로 보이겠지만, 그런 중증환자들과는 할 말이 별로 없으므로 상대하지 않겠다.

한국의 대북사업기관은 국정원과 통일부인데, 국정원은 대북공작, 첩보를 담당한 대북간첩기관인데 비하여 통일부는 대북공작, 첩보와는 관련이 없고 대북정치사업을 담당한다. 조평통은 통일부를 상대하여 대남정치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대남공작, 첩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조평통이 아니라 별도의 비밀기관이 존재한다. 조평통은 통일부를 상대하고, 통일운동에 관련된 인사들과 접촉하는 통일사업기관이다. 한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김용순, 안병수, 전금진, 김령성 같은 사람들이 조평통의 지도급 인사들인데, 김용순, 김령성 같은 인사는 서울에도 다녀갔다. 이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국정원은 더 잘 알고 있다.

그 동안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의 정계, 학계, 사회계, 재계 인사들 중에 조평통의 지도급 인사들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만일 조평통이 대남간첩기관이라면 그들과 만났던 한국의 각계 인사들은 모두 송 교수처럼 국정원에 끌려가서 대남간첩기관과 접촉한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국정원이 조평통을 대남간첩기관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조평통이 대남간첩기관이 아니므로 조평통과 송 교수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였던 김경필도 역시 해외에 파견된 간첩이 아니었다. 김경필은 독일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교포들과 접촉하는 일을 담당했던 인물로 보면 된다. 만일 김경필이 독일에 침투한 간첩이었다면 재독교포들에게 얼굴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평통이 대남간첩기관이 아니고 김경필이 독일침투간첩이 아니므로 송두울도 재독간첩이 아닌 것은 당연지사다. 조평통은 대남정치사업기관이고 김경필은 그 해외연락담당자였으며 송두울은 재독통일인사다. 송 교수에게 간첩누명을 씌우려는 국정원과 검찰공안부, 그리고 송 교수를 간첩이라고 공격하는 한나라당과 극우언론들은 있지도 않은 간첩사건을 조작하려는 악질적이고 음흉한 간계를 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한나라당, 극우언론은 송 교수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워보려고 광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건진상을 교활하게 왜곡·은폐하려는 것이다.

(5) 송 교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김경필 망명(또는 납치)사건에 있다고 해야 한다. 김경필 망명(또는 납치)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4년 전에 나왔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드러난다. 김경필 망명(또는 납치)사건의 중심에는 1990년대 후반에 안기부가 독일 현지에 위장침투시킨 대북간첩의 암약이 있었다. 그 대북간첩의 이름은 최창동이다.

최창동은 국내 모 대학의 법대교수였다. 그냥 교수가 아니라 놀랍게도 '민주화 교수'다. 아니 민주화 교수로 철저하게 위장한 안기부의 대북간첩이었다. 안기부는 민주화 교수로 위장한 최창동을 1990년대 중반에 베를린에 파견하였다.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에 객원교수직을 얻어 암약하게 한 것이다.

송 교수는 뮌스터 대학에서 가르치기 전에 바로 그 훔볼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국내에서 민주화 교수로 위장하고 파견된 최창동과 국내외에 통일운동인사로 널리 알려진 송 교수는 같은 대학에서 서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창동이 아무리 송 교수와 지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송 교수의 비밀사항(조평통과의 연락내용)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최창동은 재유법법민련에 국내 민주화 교수로 위장침투하는 데 성공하여 중앙위원이 되었다. 안기부의 대북간첩이 범민련 중앙위원이 된 것이다. 최창동이 범민련 중앙위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암약하면서 주요공작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베를린 주재 이익대표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김경필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교수로서 범민련 중앙위원으로서 철저하게 위장한 최창동은 김경필에게 접근하여 친해진 다음, 김경필이 사용하던 휴대용 컴퓨터를 잠시 빌려가는 방법으로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빼냈다. 그 자료들 중에는 송 교수에 관련된 자료도 들어있었다. 최창동이 빼돌린 송 교수에 관련된 자료들은 안기부 본부에 전달되었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송 교수에게 전해주면서 장례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김경필이다. 김경필은 최창동이 자기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돌렸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김경필에게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안기부의 대북간첩 최창동의 마수에 걸려들었던 김경필은 나중에 가서 최창동의 정체를 알았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안기부의 대북간첩에게 속아 이용당했던 김경필은 평양에 돌아갈 수 없었기에 평양에 아들딸을 남겨둔 채 처와 함께 제3국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송 교수나 조평통은 국정원이 최창동의 간첩활동을 통하여 김경필이 관리하고 있었던 컴퓨터 자료를 물증적으로 확보한 것을 알지 못했다. 망명한(또는 납치된) 김경필이 황장엽이나 오길남처럼 송 교수에게 불리한 정보를 진술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진술이 아니라 관련물증이 교묘하게 빼돌려졌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은 김경필, 황장엽, 오길남의 진술만 가지고서는 송 교수에게 '간첩'누명을 씌울 수 없다. 국정원의 간첩조작에는 그 자들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관련물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최창동 간첩사건은 그런 관련물증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조평통은 최창동 간첩사건을 김경필 부부를 제3국으로 망명(또는 납치)시킨 사건으로만 파악했고, 송 교수에 관련된 컴퓨터 자료가 안기부의 손에 '물증'으로 넘어간 사건이라고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조평통은 송 교수가 귀국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신변이 위험하므로 귀국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만류하지 않았고, 송 교수 자신도 국정원에 드나들면서 몇 차례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그냥 넘어갈 줄로 예상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던 것이다.

(6) 그러면 송두울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사건이 '간첩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면 무슨 사건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송두울 사건은 조선노동당 당원 사건이다. 송 교수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당원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한나라당, 극우언론들은 송 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허튼 수작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웃기지도 않는 여론공작에 불과하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것은 장례위원 명단이 노동신문에 발표될 때 나온 것이다. 평양당국은 당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진짜 명단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정원도 알고 있다. 국가행사가 있을 때마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정치국 위원명단은 실제 명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진짜 명단은 철저하게 비밀로 되어 있다.

송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진짜 명단을 비밀로 감추어두려는 평양당국의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송 교수는 진짜 당정치국 후보위원 대신에 가짜 후보위원으로 공개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관행이다. 그래서 송 교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올라 노동신문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송 교수가 당정치국 후보위원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은 국정원, 한나라당, 극우언론의 간계에 돌아나는 한심한 일이다. 해외교포학자가 당정치국 후보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아동만화 같은 얘기가 아닌가.

송 교수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당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송 교수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송 교수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조선노동당원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정부관리들은 조선노동당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은 노동당원을 서울로 초청하여 환영하고, 평양에 가서 노동당원과 만나 회담하고, 노동당원과 합 의서도 채택하고, 노동당원에게 값진 선물도 준다. 노동당원은 아시안게임 때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한국에 왔었다. 한국사회는 노동당원들을 환대하였고, 그들과 함께 한반도가 그려진 단일기를 들었으며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느꼈다. 조선노동당원은 앞으로 더 많이 한국사회를 방문할 것이며, 한국의 정치인들과 정부관리들은 노동당원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것이다. 조선노동당원과 한국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벽은 와르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송두울이라는 조선노동당원에 대해서만은 그렇게도 혈안이 되어 악의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가.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중증환자들이 아니라면 왜 송두울을 매장시키지 못해서 그토록 광분하는가.

국정원, 한나라당, 극우언론이 평소에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에는 모두 공산당이 있다. 그 나라에서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다. 공산당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사회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천추에 씻지 못할 대죄가 되어야 하며, 조선노동당원 송두울이 견디기 힘든 고초를 받아야 하는가.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시각에서 보면, 송두울 탄압사건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극우세력의 광기 어린 난동으로 보인다.

극우난동의 주범인 정형근이 한나라당에 가입한 것이나 권영길씨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각 개인들의 정치적 선택인 것과 마찬가지로, 송두울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것도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다. 정형근에게 한나라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고 권영길씨에게 민주노동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면 재독교포 송두울에게도 조선노동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송두울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폭도들에게 물어보자. 재독교포인 송두울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것 때문에 국가안보가 흔들리는가? 국기가 문란해졌는가? 국가가 손해를 보았는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쳤는가? 만약 송두울 교수가 조선노동당을 고무, 찬양하고 노동당에 가입하라는 당원활동을 하였다면 문제는 다를 수 있으나, 그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노동당원임을 숨기고 살아왔다. 도리어 국정원, 한나라당, 극우언론들이 송두울 사건을 가지고 미쳐 날뛰는 통에 사회정서가 불안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정신적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처벌해야 할 주범은 송 교수가 아니라 국정원, 한나라당, 극우언론들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공산당이 정치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데, 이 사회에서는 해외교포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사회를 규정하는 정치적 기준은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비공산당과 공산당이 자유경쟁을 하고, 공산당과 비공산당의 공존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기준으로 가능할 때 자유민주주의사회와 야만사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현재 한국사회는 어떤가? 자기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조선노동당을 선택한 해외교포학자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한국사회는 이성을 잃은 극우파시스트들의 난동에 짓눌려 자유민주주의가 산산이 부서진 야만사회가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의 합법적 정치활동을 금압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사회가 절대대로 아니며 극우파시스트가 판을 치는 야만사회다. 야만사회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야수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사건이 벌어진다. 송두울은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골짜기에 끌려간 희생자다. 수많은 송두울이 정계에 진출하여 합법적으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이 땅에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